

조기대선 레이스 본격화

이재명, 오늘 당대표직 사퇴

‘민생우선’ 중심 행보 전망

마지막 최고위원회의 주제 뒤 당직 정리
계파 아우르는 당내 경선 캠프 꾸릴 듯
늦어도 내주 출마선언 이뤄질 것으로 예상

조기 대선 정국 속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대권 도전을 앞두고 당직을 정리하는 것으로, 대선 출마 선언은 당무위원회 등을 거쳐 당 대표직 사퇴가 수리된 이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8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9일 오전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6월 3일을 대선일로 발표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가 정해짐에 따라 대선 출마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 선두를 달리면서도 자신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아껴 왔다.

조기 대선이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 도전을 거론할 경우 자칫 오만한 모습으로 비치면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날짜가 나온 만큼 이 대표는 그간의 구상을 토대로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 당내 경선 캠프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의 합류도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계파를 아우르는 캠프를 꾸려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비판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상당수가 이미 당직을 맡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선 캠프가 발족하고 나면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을 조율하고 출마선언문에 담을 메시지를 가다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출마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출마선언문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왔던 ‘민생우선’ 기조 등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비상계엄 여파에 더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어려워진 만큼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출마 선언 장소로는 국회를 포함해 복수의 선택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김문수, 고용부 장관직 사퇴

“국민들이 원해 출마 결심”

“국란 극복하고 힘모으는 데 함께할 것”
국민의힘 입당 계획엔 “상의해야”
尹 복귀 바랐는데 파면 돼 안타까워

보수 진영 대선 후보군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8일 장관직을 사퇴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후 장관직 사의를 표하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김 장관은 여론 대선주자 중 선두에 있었지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다.

이어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두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제가 아는 분도 원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어려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껴 사의를 표명하고 출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기인 국란이라고 보는데 그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도 굉장히 힘들어 국태민안을 위해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국란을 극복하고 나라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거기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식 출마 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내일쯤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입당 계획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좀 상의를 하고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권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보



보수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 뜻이 아닌 국민들의 뜻”이라며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정치 현실과 국민들의 답답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경쟁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다. 제가 도지사할 때 성남시장했고 제가 성남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표와 돌아가신 형님, 형수님 다 잘 알고 있다”며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께서 잘 느끼고 계실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복귀되기를 바랐는데 파면돼 매우 안타깝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선거날짜가 결의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대선·개헌 동시투표, 사실상 불가능”

민주당 회동 불참으로 양당 합의 못해
국민투표, 현재서 ‘한정 위헌’ 판결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개정해야

조기 대선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 동시투표 이슈가 좌초될 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6.3 대통령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말을 한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일정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인해 전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이 취소된 것은 민주당 측에서 ‘대선·개헌 동시투표’ 주장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서다.

개헌 절차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시작된다. 개헌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의결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일단 법이 발의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을 거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이루려면 현실적으로 커

다란 벽을 넘어야 한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절대 지지가 필요하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여권의 협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각 당의 입장차가 선명한 상황이라서 여야 합의안 마련조차도 어렵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한 뒤 국민의힘은 7일 여기에 찬성했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동을 걸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극복이 훨씬 중요하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개헌에 미적지근하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 위헌 판결을 받아, 현행법상 국민투표법을 시행할 수 없다. 현재가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해당 부분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대선일인 오는 6월3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를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 불발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각 정당이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더라도, ‘대선·개헌 동시투표’는 어려운 셈이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더라도 개헌안 합의가 쉬울지도 미지수다.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양당의 견해차가 크다.

결국 큰 틀에서는 합의하더라도 각론에서 협상이 안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서예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오는 6월 3일’ 확정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6월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꺾이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68조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꺾이 시 꺾이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준비가 착수된 가운데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배너가 설치되고 있다. /뉴스1

로부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되면서, 60일째인 6월3일에 21대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앞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19대 대선이 대통령 꺾이 60일째 되는 날인 같은 해 5월 9일에 진행된 바 있다.

/서예진 기자